

2005. 11. 1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대책 촉구·건의문

충청북도의회

정부의 쌀 산업 및 농가보호 대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부 장관, 각 정당대표)님께

평소 국정의 다망하심에도 국가경제의 활력화를 통한 국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민족 생존의 근간인 농업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하였던 “쌀 관세화 유예 협상 비준 동의안”이 지난 10월 2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상정 의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충청북도의회의원 모두는 우리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WTO, FTA, DDA 등 국제농업환경 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세계 신 무역질서를 거역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5천년의 찬란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며 면면히 이어져온 삶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이야 말로 절대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 현실은 농업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더욱 팽배하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높아져 황폐하고 삶의 활력을 잃어가는 촌락으로 전락하여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농산물은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인하여 가격경쟁에 뒤져 설자리를 잃은 지 오래되었으며 생산 원가에도 못 미쳐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여 농업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농산물 수입으로 발생하는 쌀 가격하락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농가 소득보전대책”, “농가부채 경감 대책” 등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항구적 대책 없는 쌀 수입 개방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파탄으로 몰고 가 농촌경제의 붕괴를 초래하여 민족의 식량안보까지 위협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안이하게 대비해온 점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과 국민들이 공감하는 쌀 협상 대비책을 강구함은 물론 쌀 산업과 농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150만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 1. 쌀 개방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므로 품목별, 연차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 하라.**
- 2. 정부는 공공비축물량과 매년 일정량의 매입물량을 확대하여 식량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라.**
- 3.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설정시 매년 증가하는 물가상승률과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고정형직불금의 지급단가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보전 대책이 되도록 하라.**

4. 정부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 확충과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쌀 민간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라.
5.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업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하고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라.
6. 농가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농업·농촌 회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라.

2005년 11월 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